

[종합·해설]

北 “수해복구 도와달라” 공식 요청

물자 지원 사의 표명…대북 지원 한층 탄력 받을 듯
南, 정치적 부담 줄어…경색 국면 돌파구 될지 주목

북한이 9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통해 수해 물자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구체적인 구호 물자까지 요청하면서 대북 지원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이미 이달 들어 남한의 지원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우회로’를 이용해 표시하기 시작했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5일 남한 당국이 북한의 수해 피해를 지원하는데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남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

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북한은 그러나 지원 수용 의사를 내비치면서 민간 단체의 지원을 ‘묵묵히’ 받아들이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이날 필요한 구호 물자까지 꼽으며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보인 것.

북한의 수해 피해가 예상 외로 심각하고 특히 지속적인 경제난 속에서 자체적인 복구 작업은 더욱 어려운 사정임을 말해준다.

북측은 6.15 남측으로 보낸 팩스에서 “피

해복구 물자로 복구 사업에 실제 긴요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멘트, 강재 등 건설 자재와 화물 자동차를 비롯한 건설 장비 그리고 식량, 모포, 의약품 등을 기본으로 했으면 한다”며 당장 수해 복구가 절실히 할퀘했다.

조선신보에 따르면 이번 접종호우로 북한에서는 549명의 사망자와 295명의 행방불명자, 3천4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1만6천 667동 2만8천747가구가 피해를 입었으며 2만3천974경보(1정보는 3천평)의 농경지와 도로·노반 등이 파괴됐다.

또 북측이 남측의 쌀 비료 지원 중단 조치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남측에서 대북 수해복구 지원 움직임이 활발해 지면

서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고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 지원 단체를 중심으로 구호 물자가 전달되고 심지어 한나리당에서도 지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남한 정부도 관련 단체 및 당정 협의를 거쳐 이번 주 중으로 지원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북한은 기존의 ‘강경 거부’를 풀 명분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

북측이 남측에 공식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우리 정부로서도 북녘 동포의 수해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해야하는 동시에 민간을 통한 간접 지원 형식으로 대북 구호에 나서 미사일 발사로 조성된 정치적 부담을 줄이게 됐다. /연합뉴스

潘 외교, 아베에 야스쿠니 참배 중단 촉구

일본을 방문 중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9일 오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자체를 요청했다.

반 장관은 이날 아베 장관과의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최근 역사문제로 양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아베 장관이 이런 문제를 적절히 염두해 두고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반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아베 장관의 야스쿠니 참배로 한 일 양국 관계가 경색된 점을 의식, 우회적으로 참배 자체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 장관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6자회

담에 대해서는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로 국제 사회가 단결해 강력한 메시지 보낸 것을 평가하며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적절히 협력하되,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주는 두갈래의 문제 해결 방식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하시모토 류타로 전 총리 장례식 참석을 겸해 방일한 반 장관은 일본의 차기 자민당 총재이자 차기 총리로 가장 유력시되는 아베 장관과 총리 관저 접견실에서 35분간 회담했다. 반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선 한일 관계는 미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고이즈미총리 15일 참배 반대”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

일본 국민의 절반 가량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의 오는 15일 종전기념일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지난 5.6일 실시해 9일 보도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이즈미 총리의 15일 참배에 대해 49%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43%에 불과했다.

차기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들의 50%가 반대, 40%가 찬성을 각각 표시했다. 지난 6월의 조사와 비교하면 반대가 8포인트 증가한 반면 찬성은 6포인트가 줄었다. 또 야스쿠니에서 태평양 전쟁의 장본인인 A급 전범을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62%가 찬성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한국서 신농촌 배울 것 없다”

中 참관단 지적 관광 일색 돈만 낭비…해외 견학에 부정적

“가보지 않으면 모른다. 가면 놀란다. 100만 원 이상을 쓰고도 아무 것도 배우지 못했다.”

최근 새마을운동을 배우기 위해 중국 동북지방의 A시(市)가 구성한 참관단으로 한국에 다녀온 촌(村) 단위의 당시기 쉬(徐) 모씨는 한국 농촌 배우기 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20명 정원의 제6기 연수반으로 지난 6월 한국을 다녀온 그는 “시가 조직한 한국 참관이 우리 같은 촌뜨기의 견문을 넓혀주고 눈을 띠게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신농촌 건설에 필요한 지식은 아무 것도 얻은 게 없

다고 떨어놓았다.

참관단으로 함께 다녀온 연수생들이 하나 같이 좋은 경험은 했지만 거기서 배운 것은 없다고 느꼈다는 것이다. 쉬씨의 설명에 따르면 A시에서는 지난 3월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촌단위 당시기 120명을 한국에 보냈다. 1인당 1만여 원(1위안은 약 121원)씩 모두 100여 만 원의 경비는 모두 시 재정으로 부담했다.

쉬씨는 “출발 전 한국의 경험을 가져와 우리 마을에 접목시켜 꽃을 피우겠다는 결심으로 부풀어 있었다”며 다녀온 뒤 “마음이 영

편치 않다”고 말했다.

지나는 한국 농촌마을마다 걸려있던 ‘환경 신농촌 건설 참관단’이라는 종문 플래카드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그는 말했다. 신농촌 건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 이미 한국의 관광 상품으로 변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다.

신화통신과 경화시보 등 중국 주요 언론들도 왕 시장의 이런 시각에 공감하는 내용으로 신농촌 건설을 위한 해외 견학 자체를 촉구하는 기사를 잇따라 내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서 신농촌 배울 것 없다

中 참관단 지적 관광 일색 돈만 낭비…해외 견학에 부정적

한국서 신농촌 배울 것 없다

한국서 신농촌 배울 것 없다</